

민주 “공수처법 개정 착수… 다음달 2일 처리한다”

의결 정족수 완화 방안 등 추진 국민의힘, 총력 저지 방침 예산안 처리 앞 여야 충돌 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추천이 지연되면서 19일 여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 개정을 통해 연내 공수처 출범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하며 내년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있는 정국국회에 먹구름이 드리운 상황이다. 민주당은 빠르면 내달 2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전날 최종 후보를 추천하지 못하고 사실상 활동을 종료한 데 대해 “이제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본격적으로 공수처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수처장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7명 위원 중 6명 이상 찬성하는 합의제에 가까운 추천 절차를 마련했으나, 아무리 훌륭한 제도도 악용하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것을 야당 스스로 증명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 기다리라고 야당의 반대와 지연 행태가 개선될 여지가 없어 보인다”며 오는 25일 법사위에서의 법 개정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은 특히 공수처법에 보장된 ‘비토권’이 야

당의 지연작전에 약올렸다고 보고,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하거나, 추천위원 추천이 늦어지면 국회의장이 법학교수회장과 같은 학계 인사를 지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반개혁 세력의 공수처 난도질을 다는 좌사하지 않겠다”며 “비토권을 포함해 합리적 안을 도출해 정기국회 내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이후에 협상이 이뤄지더라도 별도의 문제”라며 “이를 기다리면서 법 개정을 미루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김용민·박범계·백혜련 의원의 공수처법 개정안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개정안을 병합 심사한 뒤 법사

위 전체회의, 본회의까지 속도전으로 밀어붙일 태세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에서 “반대하는 것을 낚 달 가까이 존중하고 경청하고 토론했다”며 “국회 의석수에 따라서 결정해야 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발했다. 김종민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의 법 개정 시도에 “우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자기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처장을 임명하기 위해 제대로 시행해보지도 않은 법을 또 바꾸겠다고 한다”며 “법치주의 파괴, 수사기관 파괴, 공수처 독재로 가는 일을 국민이 절

대 좌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규탄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이라도 추천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다만 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내세워 법개정을 강행하면, 마땅히 막을 수단이 없다는 게 탈레마다. 이에 따라 대국민 여론전에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나서면, 국회선진화법 등이 있어서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다. 염치 없지만 국민들께서 막아주시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주당 “공수처 연내 출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오른쪽 두번째) 간사와 법사위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 무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결산안·민생법 80여건 처리

조두순 방치·비위 체육지도자 퇴출 법안 등

빛가람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이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을 얼마나 구입하는지를 공표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2019회계연도 결산안과 80여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결산안 처리는 2012년 이후 9년 연속 ‘지각 처리’였다. 국회법에 제128조에 따르면 국회는 전년도 결산안을 정기국회 시작일(9월1일) 전에 처리해야 한다. 국회가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지난 9월 24일 이후 약 두 달만이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더불어민주당 조오섭(북구갑)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물품 구입을 늘리는 효과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또 미성년자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계기로 마련된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당국의 관리를 한층 강화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이 개정안은 전자장치 부착 명령 위반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보호관찰소의 전자감독 전담 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 직접 수사를 허용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0이 법안은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늘려, 육아휴직을 총 3번에 걸쳐 나눠 쓸 수 있도록 했다. 법 시행 전에 휴직했거나, 현재 휴직 중인 경우도 확대된 분할 횟수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밖에 도가축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철인3종 고(故) 최수현 선수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비위 체육지도자의 퇴출이 가능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될 수 있게 됐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문 대통령 지지율 42.5%

리얼미터…민주 32%·국민의힘 29.5%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공정평가)가 지난해 ‘조국 사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6~18일 사흘간 전국 유권자 1506명을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는 전주보다 1.8%포인트 하락한 42.5%로 나타났다. 한편, 정당 지지율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전주보다 0.8%포인트 하락한 32.0%, 국민의힘은 2.2%포인트 상승한 29.5%를 각각 나타냈다. 야당 지지율 격차는 2.5%포인트로,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이다. 그 밖에 국민의당은 6.6%, 정의당은 5.9%, 열린민주당은 5.9%의 지지율을 나타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

이병훈, 콘텐츠산업 투·융자 활성화 재원 마련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병훈(동남을) 국회의원은 19일 “콘텐츠산업 투·융자 활성화 재원 마련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06년부터 위풍당당 콘텐츠 코리아 펀드 출자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19년말 기준으로 모태펀드 문화계정에 총 6721억 원을 출자하고 97개 투자조합, 2조1198억원을 조성했다. 모태펀드가 지난 10여 년간 콘텐츠산업 투자 활성화에 큰 역할을 했으며, 그 결과 콘텐츠 산업



도 비약적 발전을 해왔지만 아직도 콘텐츠 특성을 반영한 투자지원 시스템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정부로부터 국고를 출연받아 보증기관에 재출연하여 보증부 대출을 확대하고, 중소·영세 콘텐츠기업을 대상으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형석,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30일 감치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형석(북구을) 국회의원은 19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였을 경우 지방세를 납부할 때까지 최고 30일 동안 감치(監置)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10억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전두환 씨 등 고액 체납자들에게 대한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2020년 8월 기준 지방세 3회 이상 체납, 1년이상 경과, 1000만원 이상 상습체납자는 1만7703명에



이르며 체납금액은 7903억여원에 달한다. 하지만 현행법 상 지방세 고액 약 1억 5천만 원에 대한 체납 조치는 명단 공개에 불과해 대다수 체납자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하고 있다. 특히 전두환은 지난해 골프 라운딩과 고급 주식당에서 코스 요리를 즐기며 여전히 호의호식하고 있다.

김희재, 25일 국회서 ‘전라선 고속철 조기 구축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김희재(여수을) 국회의원은 오는 25일 10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전남도와 함께 ‘전라선 고속철도 조기 구축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대학교 고승영 교수가 좌장을 맡고, 대한교통학회 정진혁 부회장의 ‘전라선 고속철도 구축방향과 기대효과’라는 주제 발표로 시작한다. 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박진홍 과장과 국가철도공단 김운양 처장 등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전라선 고속철도 조기 구축의 당위성과 관련, “인구와 산업 절반이 수도권에 편중된 상황에서 경제성보다는 균형발전이 초점을 두



고,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에 대규모 예산을 투자함으로써 낙후지역의 성장동력을 만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면서 “전라선을 고속철로 신설하게 되면 익산-여수 구간이 기존 98분에서 60분으로 단축되면서,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부합하는 서울-여수 2시간대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
각서·운송료·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
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절대 수수료 **없음**
출장비용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수수료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010-9576-8289
직통전화 **062)464-9706**

민식이법 시행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수칙

민식이법이란 무엇인가요?

- 2020년 3월 25일 시행
- 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카메라
신호등 등 안전시설물 설치 의무
- 운전자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교통사고 「특정범죄가중법」 적용

사망 3년이상 또는 무기징역
상해 1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과
법규준수 잊지 마세요.”

KoROAD
도로교통공단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일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